

이달의 초점

## 지역 인구변화의 다층적 이해와 과제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장인수 |

생애주기 사건과 지역 이동: 대학 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

| 이지혜A |

생활권 이동과 지자체 정책 체감

| 고제이 |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 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인구이동과 정주여건<sup>1)</sup>

Population Mobility and Residential Conditions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한국에서 지역 인구이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은 지역 간 생활 여건의 구조적 차이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정주여건과 근린환경이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 만족도인데, 정주여건(생활 인프라, 안전 인프라, 정서 인프라)과 도보 5분 이내 근린환경(약 400m)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권 수준에서 근린환경의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조차 근린 수준에서 균형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 특히 본인은 현재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녀 세대는 이동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배우·유자녀 집단의 이동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은 광역 생활권(예, 일자리)과 근린 생활권(예, 생활 인프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한국에서 '지역 인구'에 대한 관심은 수도권 인구 집중(전입)과 지역 인구 감소(전출)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층 유출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로 전환하여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런 이유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인구 소멸

1) 이 글은 강지원. (2025. 12. 11). 지역 인구와 정주여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1회 인구포럼 발표자료)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에 지역에 정주하거나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는 지역 인구이동을 단순히 '유출 문제'로 인식해 온 기존 접근의 한계를 보여 준다.

지역 간 인구이동은 단순한 이동 현상이 아니라 지역 간 생활 조건의 차이 때문에 형성되는 구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자리, 교육,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요소를 포괄하는 '정주여건' 개념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도 지역에 따라 이주 의향이 달라지는 현상은 정주여건의 차이가 핵심 설명 변수임을 시사한다. 즉, 인구이동을 지역 간 삶의 질과 생활환경의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구역 단위보다 주거지 인근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 단위에서 정주여건을 파악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개별 부처 단위의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와 정주여건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인구의 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정주여건과 근린환경의 개념을 검토한 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지역 인구이동 현황

### 가. 국내 인구이동의 구조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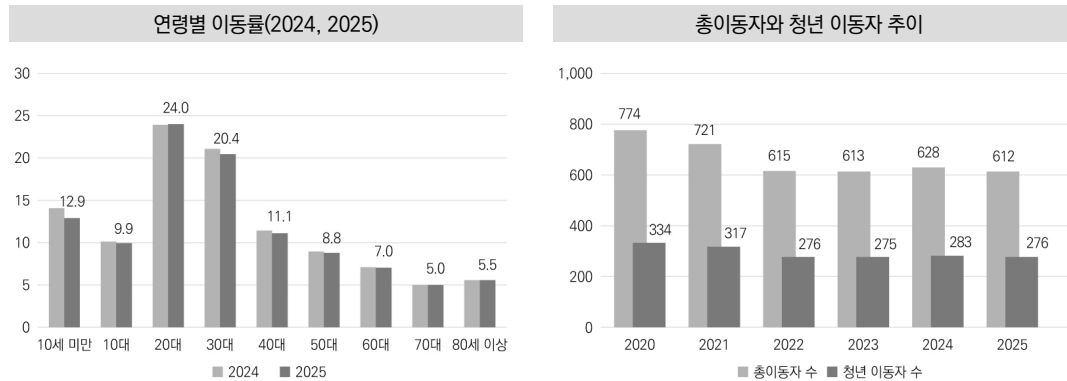
한국에서 인구이동은 매년 수백만 명 규모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이동자 수는 약 611만 명이다(행정구역 간 주민등록 전·출입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2.0%가 매년 거주지를 이동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n.d.-a). 한편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구이동률은 2021년 이후 감소하였다(국가데이터처, n.d.-b).

이동 규모는 감소했지만, 지역 간 이동의 방향성은 여전히 뚜렷하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지속적이다.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내부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 패턴은 지역 간 구조적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데, 교육과 취업 기회를 따라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장년층 이상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은퇴 연령 이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

**[그림 1] 연령별 이동률과 이동자 추이**

(단위: %, 만 명)



주: 1) 이동률은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로 산출하며, 이동자 수는 행정구역 간 주민등록 전출입 기준임.  
 2) 총이동자 수(예: 774만 명)는 청년 이동자 수(예: 334만 명)를 포함하는 수치임.  
 3) 청년 이동자는 20대와 30대 이동자 수를 합한 것임.

출처: 1)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률,” 국가데이터처, n.d.-a,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6\\_A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6_A01&conn_path=I2)  
 2)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 수,” 국가데이터처, n.d.-b,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I2)

는 흐름도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적 관심은 주로 청년층 유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다양한 연령집단의 이동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접근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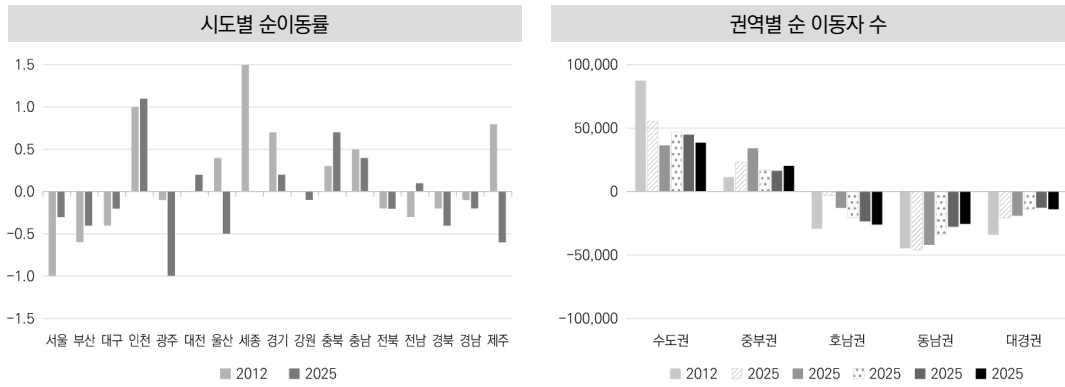
### 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격차

지역 간 인구이동은 권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시도별 순이동률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중부권 지역에서는 순유입이 나타나는 반면 호남권과 동남권, 대경권 등 다수 지역에서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순이동률의 악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지역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여전히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중부권 일부 지역도 순유입을 보이는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전반적으로 순유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이동 격차는 단순한 인구 규모의 차이를 넘어 지역의 경제 기반, 산업 구조, 생활환경 등의 복합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과 다수 지역의 인구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소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림 2] 시도 및 권역별 지역 인구(순)이동

(단위: %, 천 명)



주: 1) 순이동률은 특정 지역의 인구 100명당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순이동자 수의 비율임.  
 2) 권역은 국정기획위원회(2025)의 '5극3특'을 참고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강원+충북+충남+세종,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동남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출처: 1)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률," 국가데이터처, n.d.-a,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6\\_A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6_A01&conn_path=I2)  
 2)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 수," 국가데이터처, n.d.-b,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I2)

### 3 정주여건과 근린환경의 개념

#### 가. 정주여건의 개념과 구성

정주(定住)는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주여건은 이러한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정주여건을 주거환경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 기반'으로 확장하여 사용한다(오정민, 이상협, 2025).

선행 연구에서는 정주여건의 구성 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경제 및 일자리,

주거 및 생활환경, 사회서비스, 생활 인프라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수욱 외(2009)는 정주여건을 생활환경, 자연환경, 경제환경, 복지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등으로 구분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여가,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지표로 정주여건을 측정한다(김상민, 이성원, 2025). 이와 유사하게 정부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정주여건 개선 계획'을 제시하면서 문화·교통 편의 향상과 보육·의료 여건 개선, 스마트 라이프 구현을 제시하였다(윤정란 외, 2020, p. 20).

정주여건에 대한 분석은 주로 공통의 속성을 갖는 지역(예: 농촌, 혁신도시, 인구 감소 지역 등)이

나 특정 행정구역(예: 경기도, 김해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면 최현우와 이진(2024)은 농어촌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민 정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교육·문화 분야, 정주 기반, 경제·일자리 분야의 생활 여건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정주여건은 지역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주민의 정주 의향 혹은 인구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나. 근린환경과 생활권 접근

정주여건이 지역 수준의 포괄적 개념이라면 근린환경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 인근 생활권 단위의 환경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정주여건 개선 전략은 궁극적으로 근린환경 수준의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귀결된다.<sup>2)</sup>

근린환경은 주거지 주변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요소로, 교육시설, 공원 및 녹지, 문화·복지시설, 공공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근린환경은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보행환경, 지역 경관,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와 같은 비물리적 요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근린환경 내에서도 생활 인프라의 구성은 사회경제적 격차와 연계되기도 하고,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문지영, 2023). 예를 들

면 도시 생활권 공원은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졌는데, 생활권 공원의 접근성이 주민의 사회경제적 격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물리적 근린환경의 특성은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행권역(반경 400m 이내)과 보행권역을 초월하는 광역(반경 1km)에 따른 차이도 있다(안용진, 2019).

이러한 이유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의 생활 만족도와 정주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주여건을 분석하려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단위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다만 생활권 단위를 설정하는 데 지역 특성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400m 생활권과 서울의 400m 생활권은 도시 밀도, 시설 배치, 보행환경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맥락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근린환경 접근성의 물리적 기준을 보행 거리 중심으로 설정하여 해석한다.

근린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페리(Perry, 1929)의 근린주구 이론이 있다(Perry, 2020). 근린주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거, 교육, 생활시설, 공용공간이 결합된 생활권 단위를 의미하는데, 현대 도시계획과 생활권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2) 윤정란 외(2020)에서 생활 인프라는 의료시설, 구매·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및 여가 문화시설, 행정시설, 교통시설, 생활SOC시설 등을 포함한다. 최현우와 이진(2024)은 정주 기반 분야 생활여건에 대중교통, 인터넷, 도시가스, 생활서비스, 생필품 및 식자재 구매, 식사할 수 있는 가게, 주택 상태, 교통사고 위험, 범죄 위험 등을 포함시킨다.

이론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활시설의 공간적 배치와 접근성이 정주환경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 준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학교군, 생활권 계획 등 다양한 정책에서 근린주구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린환경을 생활권 단위에서의 물리적 접근성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보행 가능 거리(도보 5분 이내 약 400m, 도보 15분 이내 약 1km, 비도보권)를 기준으로 근린환경을 구분하고, 생활 기반(인프라)의 접근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 4 분석 자료 및 방법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5년에 실시한 '지역 정주여건 및 인구이동 인식 조사'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 생활 만족도, 이주 의향, 정주여건, 근린환경 등을 포함한다.

분석 방법은 기초분석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기초분석에서는 이주 의향의 분포, 지역 생활 만족도와 이주 의향 간의 관계, 근린환경 총족 수준, 정주여건 인식과 이주 의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회귀분석에서는 이주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근린환경과 정주여건, 타 지역 활동, 개인 및 가족 요인 등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요인이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종속 변수인 이주 의향은 이동 행동의 선행 지표이나, 개인의 자원·제약 조건에 따라 이주 의향과 실제 이동 간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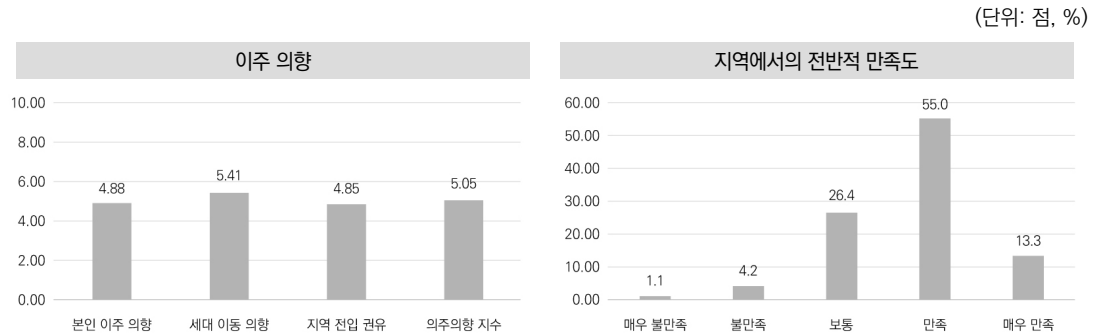
정주여건은 기초 인프라(대중교통, 통신, 공공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생필품 구매, 식사 환경, 주택 상태 등), 안전 인프라(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로부터의 안전), 정서 인프라(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로 구분하여 각 문항 점수를 평균화한 지수로 측정하였다. 근린환경은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필수 시설(근린환경1), 도보 15분 이내 일상생활 시설(근린환경2), 도보 이용이 가능하지 않아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시설(근린환경3)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총족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는 저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구분으로, 근린주구 이론의 생활권 개념을 한국의 현실에 맞춰 적용한 것이다.

#### 5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분석 결과

##### 가. 이주 의향과 지역 생활 만족도

이주 의향은 개인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분석 결과 본인의 이주 의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자녀 등 미래세대에게 이동을 권유할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는 별개로, 다음 세대의 삶의 기회는 다른 지역에서 찾게 하고자 하

**[그림 3] 이주 의향과 지역 생활 만족도**



주: 1) 이주 의향에 관한 문항은 0~10점으로 구성된 11점 척도임.  
 2) 본인 이주 의향은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에 대한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임.  
 3) 세대 이동 의향은 '나는 자녀 혹은 조카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 직장으로 이주하라고 권하고 싶다'에 대한 평균 점수임.  
 4) 지역 전입 권유는 '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라고 권하고 싶다'에 대한 응답으로, 역점수로 환산함.  
 5) 지역 전입 권유를 역점수로 환산한 후 세 개의 응답을 평균하여 지수로 환산함.  
 6)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에 대한 응답(5점 척도)의 분포임.  
 출처: "지역 인구와 정주여건," 강지원,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

는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55.0%)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불만족' 이하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여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인식의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근린환경과 생활권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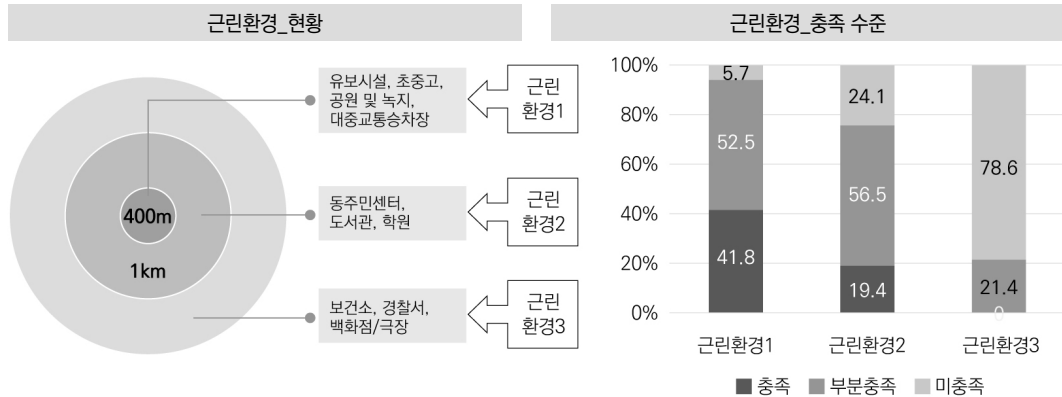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보행 가능 거리를 기준으로 근린환경을 구분하였다. 근린환경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10개 시설을 조사하였다. 개별 시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학교, 공원 및 녹지 등은 비교적 도보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반면 보건소,

경찰서, 문화시설 등은 도보 접근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능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근린환경의 공간 범위별 필수 시설을 구분하고, 각 범위에서 이를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근린환경1의 완전 충족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공원녹지, 대중교통 정류장 4개 시설이 모두 도보 5분(약 4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초등학교 통학권 수준의 필수 생활권(근린환경1)을 완전히 충족하는 비율은 약 41.8%에 그쳤으며, 상당수 지역에서 부분적 충족 또는 미충족 상태가 나타났다.<sup>3)</sup> 또한 일상생활권에 해당하는 근린환경2 역시 완전 충족 비율이 낮았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서비

3) 4개 시설 모두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는 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충족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근린환경 현황과 충족도



주: 1) 근린환경에 관한 문항은 10개의 보기 문항을 기준으로 1) 400m 거리(걸어서 5분 이내)에 있는 시설, 2) 400m~1km 거리(걸어서 6~15분 이내)에 있는 시설, 3) 우리 집을 중심으로 걸어서 갈 수 없는 시설을 측정함.  
 2) 근린환경의 보기 문항은 ①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 ② 경찰서, ③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④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⑤ 도서관(작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포함), ⑥ 공원, 녹지, 산책로, ⑦ 보건소, ⑧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⑨ 학원(아동, 청소년 및 성인 대상), ⑩ 극장 혹은 백화점/쇼핑몰.  
 3)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린환경1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포함), 공원 및 녹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을 기준으로, 근린환경2는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학원을 기준으로, 근린환경3은 보건소, 경찰서, 백화점 및 극장의 유무로 판단함.

출처: "지역 인구나 정주여건," 강지원,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

스조차 생활권 내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근린환경 격차가 주민의 생활 편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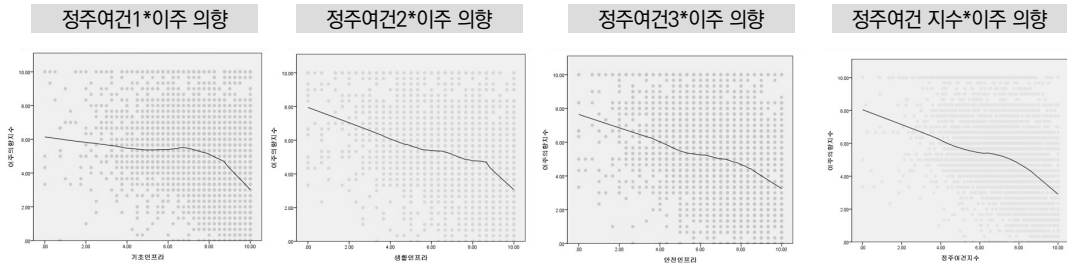
#### 다. 정주여건 인식과 이주 의향

정주여건에 대한 인식은 이주 의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정주여건을 기초 인프라, 생활 인프라, 안전 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생활 인프라와 안전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생활 인프라와 안전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주 의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기초 인프라는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는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는 정주여건 각 영역(x축: 0~10점)과 이주 의향 지수의 산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세 영역에서 정주여건 점수가 높을수록(x축의 값이 클수록) 이주 의향이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관찰되나, 영역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생활 인프라(정주여건 2)와 안전 인프라(정주여건 3)에서는 기초 인프라(정주여건 1)에 비해 이주 의향과의 반비례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 편의성과 안전

[그림 5] 정주여건에 대한 인식과 이주 의향



주: 문항은 11점 척도이며(0~10점), 10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1) 정주여건1은 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쉽다 ② 인터넷, TV 등의 속도가 빠르다 ③ 쓰레기 처리가 빠르다 ④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수를 평균화한 것으로, 저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구분임.
- 2) 정주여건2는 ⑤ 생필품과 식자재를 구매하기 쉽다 ⑥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게가 다양하다 ⑦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는 점수를 평균화한 것으로, 저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구분임.
- 3) 정주여건3은 ⑧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양호하다 ⑨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⑩ 절도, 강도,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수를 평균화한 것으로, 저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구분임.

출처: "지역 인구나 정주여건," 강지원,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

수준이 주민의 정주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준다.

### 라.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p < .001$ ), 설명력은 약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R^2 = 0.2229$ , Adj  $R^2 = 0.2189$ ).

분석 결과 이주 의향을 낮추는 변수로는 400미터 이내 시설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안전 인프라, 정서 인프라, 삶의 만족도, 타 지역에서의 활동 여부, 연령 등으로 나타났다. 즉 도보로 5분 이내 거

리의 생활환경과 생활 및 안전 인프라, 정서적 기반<sup>4)</sup>, 생활 만족도 등이 좋을수록 이주 의향이 낮아진다. 다만, 기초 인프라만 다른 인프라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이주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그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도시 집적 효과로 인해 이동 욕구도 함께 높아지는 역설적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반 시설 포화 수준에서 정주 유인이 소진됨을 시사한다. 그 외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00m 이내 시설 접근성이 높을수록 이주 의향이 낮지만( $p < .05$ ), 1km 이내 시설 접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5분 생활권 내

4) 회귀분석에서는 물리적 기반 외에 정서 기반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조사 문항은 '이웃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며, 회귀분석에는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에 근린시설이 지역 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정주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생활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생활권’이다. 따라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생활 편의

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 인프라가 좋을수록 이동 의사가 낮다( $p < .001$ ). 생필품 구매, 음식점, 주택 상태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 만큼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주

[표 1] 회귀분석 결과

		계수	표준편차	표준화 회귀계수	t
상수		12.338	0.514	-	23.99***
근린환경	400m 접근성	-0.570	0.274	-0.044	-2.08*
	1km 접근성	0.048	0.282	0.004	0.17
정주여건	기초 인프라	0.089	0.033	0.054	2.66**
	생활 인프라	-0.182	0.031	-0.124	-5.79***
	안전 인프라	-0.139	0.028	-0.089	-5.00***
	정서 인프라	-0.256	0.057	-0.060	-4.49***
전반적 삶의 만족도		-1.271	0.054	-0.331	-23.36***
타 지역 활동		-0.209	0.034	-0.082	-6.15***
성별(남성)		0.277	0.078	0.046	3.55***
연령		-0.221	0.039	-0.101	-5.69***
균등화가구소득		0.034	0.068	0.007	0.5
가족 유형 (기준: 미혼)	유배우 무자녀	0.017	0.173	0.001	0.1
	유배우 유자녀	0.313	0.115	0.052	2.74**
	그 외	0.238	0.166	0.023	1.44
종사상지위 (기준: 상용직)	기타 근로자	0.116	0.106	0.015	1.1
	비취업	0.188	0.099	0.027	1.9+
주거 형태 (기준: 자가)	전세/보증금 월세	0.101	0.091	0.015	1.1
	기타	0.270	0.258	0.014	1.05
지역권역 (기준: 수도권)	중부권	-0.052	0.144	-0.005	-0.36
	호남권	0.011	0.107	0.002	0.1
	동남권	-0.077	0.118	-0.010	-0.66
거주 기간 (기준: 3년 미만)	대경권	-0.090	0.118	-0.011	-0.76
	3~10년 미만	0.342	0.131	0.048	2.61**
거주 지역 (기준: 동)	10년 이상	0.150	0.122	0.024	1.23
	읍	-0.096	0.197	-0.007	-0.49
	면	0.031	0.124	0.004	0.25
	Model fit (N = 5,000)		F = 54.87*** R <sup>2</sup> = 0.2229 adj R <sup>2</sup> = 0.2189		

+<.10, \*p<.05, \*\*p<.01, \*\*\*p<.001.

출처: “지역 정주여건 및 인구이동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자료.

거여건이 정주에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 인프라가 좋을수록 이동 의향이 낮는데 ( $p < .001$ ), 교통안전이나 재해안전, 범죄안전이 확보될수록 지역을 떠나고 싶은 의향이 줄어든다. 한편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정서적 정착감과 관계 기반이 이동 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p < .001$ ).

무엇보다도 지역에서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는 이 모형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여 준다. 생활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질 때 이동 의향이 1.27 정도 낮아진다. 즉 정주여건의 개별 요소들보다 현재 지역에서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가 이동 의향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타 지역에서의 활동이 많을수록 이동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현재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주할 필요를 적게 느낄 수 있다. 반면에 타 지역에서의 빈번한 활동이 생활권을 확장하므로 지역 만족도를 보완하여 이주 의향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sup>5)</sup> 이동 의향에는 성별 및 연령별 차이는 있지만, 균등화 가구 소득이나 종사상지위, 주거 형태, 거주 권역 등의 차이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에, 유배우 유자녀는 미혼보다 이동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교육, 주거, 생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 더 나은 정주여건을 찾아 이동하려는 의사가 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현재 정주여건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경우 유자녀 가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인의 이동 의향에 비해 미래세대에 대한 이동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과 유사하다.

표준화 계수(B)는 생활 만족도( $B = -0.331$ )가 가장 크며, 생활 인프라( $B = -0.124$ ), 연령( $B = -0.101$ ), 안전 인프라( $B = -0.089$ ), 타 지역 활동( $B = -0.082$ ), 정서 인프라( $B = -0.060$ ) 순으로 나타났다.

## 6 나가며

이 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정책 대응의 한계를 짚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역 인구가동은 단순한 인구가동 현상이 아니라 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 만족도는 정주여건과 근린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 경험이 통합된 결과 변수이므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응도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 가. 인구정책의 확대: 인구구조에서 인구가동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

5) 다만, 이 조사에서는 역인과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지역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다뤘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다수 추진됐으나,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인구집단을 고려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주여건과 근린환경이 이주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인구이동이 지역 간 생활 조건의 차이에 의해 구조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출산이나 고령화 대응과 함께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주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24)은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역 인구이동과 정주여건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과 함께 향후 인구정책은 지역 인구이동과 관련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이동 통계를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혹은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정주여건의 격차 해소를 국가 인구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정주여건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칭)인구전략기본법은 지역 인구의 정주여건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구 이동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여 지역 인구 정책과 국가 단위 인구 전략을 제안한다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2026)<sup>6)</sup>은 (초)광역권 SOC와 산업 발전 및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025)<sup>7)</sup>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어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생활권 단위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존 법령과 부처, 위원회 간 역할 분담과 중복 방지를 위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

#### 나.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인 주거지 기반 정책 체계

그동안 지역정책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거지 인근의 근린 단위에서 이뤄진다. 이 연구에서 근린환경을 도보 5분, 15분, 비도보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생활권 내 필수 시설의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향후 정책은 근린환경 단위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

6) 법령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 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7) 법령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고,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교육, 의료, 환경, 복지, 문화, 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생활권은 행정구역을 연계한 공간 범위로 이해된다.

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욕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돌봄시설과 학교 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주여건의 정책 대상으로서 유자녀 가구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동 의향의 효과는 크지 않으나, 일자리와 주거, 자녀에 대한 교육과 돌봄, 생활 및 안전 인프라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 정부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국가의 기초 구축' 및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과제(국정기획위원회, 2025)를 통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정주여건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동 지원, 교육 혁신, 공공의료 강화,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 등 각 부문의 정책이 거주지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 단위의 평균적 공급 방식으로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의 격차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구역보다 주거지에 근접한 근린 환경 단위의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통학권 수준의 근린환경에서 교육, 돌봄, 공원, 대중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제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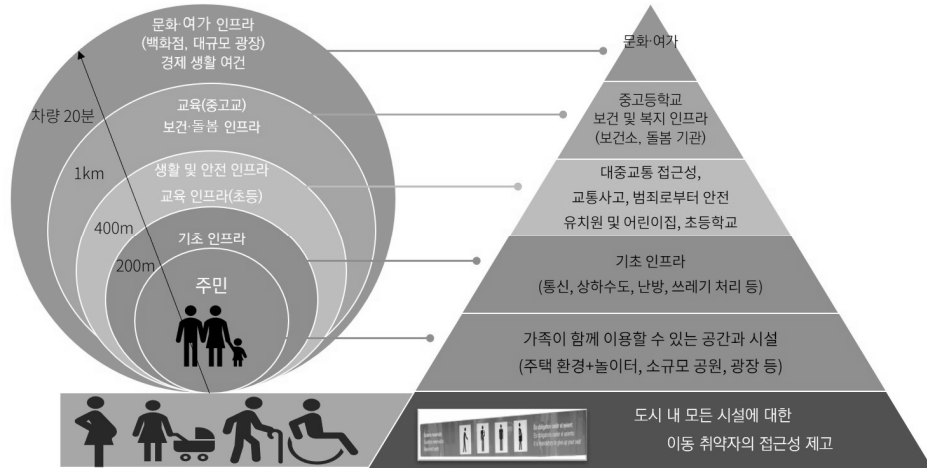
다. 일반적으로 교육 체계에서는 '학교구'라고 명명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내 노인 인구와 복지 인프라를 고려하여 여러 권역으로 구분한다(보건복지부, 2025). 일본에서는 학교구를 돌봄권역으로 활용하고 있다(석재은 외, 2018). 이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행정 구역에서 근린 단위로 전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수급을 결정하는 전달체계 개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다. 전통적인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의 균형적 접근

정주여건 중 기초 인프라(대중교통, 통신, 공공서비스 등)는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경우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생활 인프라와 안전 인프라는 이주 의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역정책은 도로, 교통, 통신과 같은 전통적인 기반 시설을 기본 토대로 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으로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필품 구매, 식사, 여가, 커뮤니티 활동과 같은 일상적 생활 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그리고 범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은 주민의 정주 의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근린환경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

[그림 6] 생활권 단위의 정주여건 구성(안)



출처: “인구정책 대응 재정 전략: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강지원, 임준경,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8을 수정·보완함.

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반으로 정주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보건, 복지, 돌봄서비스는 근린 수준에서 접근성이 확보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은 공급량 확대뿐 아니라 근린 단위에서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돌봄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근린 단위 생활권 내에 배치하고, 이동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역 인구가동은 단순한 인구가동 현상이 아니라 지역 간 정주여건의 격차에 따른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정책은 정주여건의 실질적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주거지 기준 일상 공간으로써 근린 단위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인구집단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 내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균형적인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㉞

### 참고문헌

강지원. (2025. 12. 11). **지역 인구나 정주여건**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1회 인구포럼, 서울.  
 강지원, 임준경. (2025). **인구정책 대응 재정 전략: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데이터처. (n.d.-a). **인구가동률** [데이터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6\\_A01&conn\\_path=l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6_A01&conn_path=l2)

- 국가데이터처. (n.d.-b).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 수** [데이터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3_A01&conn_path=I2)
- 국정기획위원회. (2025). **국정과제 5개년 계획(안)**.
- 김상민, 이성원. (2025). 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39(2), 159-198. <http://dx.doi.org/10.22783/krila.2025.39.2.159>
- 문지영. (2023).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 권역의 사회경제적 격차 및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9), 326-340.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석재은, 강지원, 홍성민, 이기주, 최선희, 여나금, 석춘지. (2018). 고령자복지주택 신사업추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림대학교.
- 안용진. (2019). 물리적 근린환경 특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친 영향. **GRI연구논총**, 21(1), 241-260. <http://dx.doi.org/10.23286/gri.2019.21.1.010>
- 오정민, 이상협. (2025).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 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9(4), 217-244. <http://dx.doi.org/10.22783/krila.2025.39.4.217>
- 윤정란, 김홍주, 배진원, 고지영. (2020). **혁신도시 입주민의 정주여건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인구감소지역 자원특별법. (2025). 법률 제20960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4). 법률 제20112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6). 법률 제21065호.
- 최형우, 이진. (2024).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지역 정주여건 및 인구가동 인식 조사** [데이터세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비공개 자료로 2027년 공개 예정).
- Perry, C. A. (2020). The Neighbourhood Unit - from the Regional Plan of New York and Its Environs(1929). in *The City Reader*(7<sup>th</sup> ed., p. 13). Routledge.

# Population Mobility and Residential Conditions

Kang, Ji-w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Korea, although internal migration is declining overall,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continues. These migration patterns reflect disparities in underlying factors such as regionally varying residential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s how residents' life satisfaction, residential condition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s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migrate.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migration intention. Residential conditions—including living infrastructure, safety infrastructure, and local social cohesion—as well as access to neighborhood amenities within a 5-minute walking distance (400 m), were also significant factors. Meanwhile, many areas were found to have limited accessibility to neighborhood amenities, indicating that even basic daily conveniences are not evenly provided across regions. Notably, respondents reported a lower intention to migrate themselves but a higher intention to encourage their children and younger relatives to migrate. Future policies should therefore prioritize enhanc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by improving residential conditions, particularly access to amenities within a 5-minute walking distance.